



# 보도자료

12월 15일(화) 브리핑 시(11:30) 보도

## 『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』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

### - '제4차 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계획(2021~2025)' 수립 -

- 0~1세 영아수당 신설, 영아기 집중투자 / 3+3 육아휴직제 도입,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/ 다자녀가구 지원기준, 2자녀로 단계적 확대 /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/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·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
- 신증년의 계속 고용 지원,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,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

□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「제4차 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계획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· 확정하였다.

- ※ (별첨) 1. 제4차 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(요약)  
2. 제4차 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계획(전체)

※ (붙임)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(참고) 생애주기별 지원대책(인포그래픽)

□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」(이하 「제4차 기본계획」)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.

## < 주요 핵심 정책 >

- ①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·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,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('22~)
  - (영아수당 신설) '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,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사용.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('22년 도입, '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)
  - (첫 만남 꾸러미)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(60→100만원), 아동 출생시 바우처(일시금) 200만원 신규 도입, 총300만원을 의료비·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
- ②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'19년 10.5만명에서 '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
  - (3+3 육아휴직제)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
  - (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)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원(현행 50%, 최대 120만원)
  - (중소기업 지원 확대)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,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·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(5~10→15~30%)
  - (보편적 육아휴직 권리) 고용보험 가입 특고, 예술인,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
- ③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, 서비스 내실화
  - '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('22년 53만명까지 확대)
- ④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·교육지원 확대
  -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('21~'25)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
  -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('22년~)
- ⑤ 고령자가 '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'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완성
  - (소득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21. 15만 가구 신규지원), 노인 일자리 확충(~'21. 80만개)
  - (돌봄)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('25),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(통합재가급여, 단기보호돌봄 확대)
  - (주거)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(~'25. 2만호), 고령자보호구역 확대(25. 3,000개소 이상) 등
- ⑥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'삶의 주체'로 인식,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
  - (노후소득)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퇴직연금 활성화(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), 주택연금 대상 확대(시가 9억원→공시가 9억원 등) 및 활성화('21)
  - (고용)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(경력설계-훈련-취업지원 패키지)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월40~80만원), 양질의 일자리 확충(사회서비스, 시니어인턴십 확충)
  - (건강)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(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),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

## 【 정책 방향 】

- 「제4차 기본계획」은 개인을 노동력·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「국가 발전 전략」에서 개인의 「삶의 질 제고 전략」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하였다.
-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,
  - 저출산이 '사회·경제·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'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하였다.
- 또한,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.
-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「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」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, '개인의 삶의 질 향상', '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', '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'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.
- 저출산·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 있게 병행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.
  - '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'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,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설정하였으며,
  - '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'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,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출하였다.

<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>

비전

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

목표

개인의 삶의 질 향상

성평등하고  
공정한 사회

인구변화 대응  
사회 혁신

추진전략

1. 함께 일하고  
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

- 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
- ②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
- 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
- ④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
- ⑤ 생애 전반 성·재생산권 보장

2. 건강하고 능동적인  
고령사회 구축

- ①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
- ② 예방적 보건·의료서비스 확충
-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
- ④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
- 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

3. 모두의 역량이  
고루 발휘되는 사회

- 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
- 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
- ③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
- ④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
- 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·사회참여

4. 인구구조 변화에  
대한 적응

-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
-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
-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
- 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
- ⑤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

추진체계

- ① 연도별 중앙부처·지자체 시행계획 수립
- ② 중앙·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·지역 거버넌스 구축

## 【 추진과제 】

- 추진 과제는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,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### 1.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

-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·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「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」 여건 조성에 집중
- ①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·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 보장
  - ⇒ 현행 여성,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, 비정규직,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 
(2019년 10.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목표)
  - (육아휴직, 보편적 권리로 확립) 임금근로자에서 특고, 예술인, 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
    - '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'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 확대 추진
  - (부모 모두 3개월 + 3개월 육아휴직제)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, 각각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 (신설)
    -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 대폭 확대
      - ⇒ 부모 공동 육아('맞돌봄') 활성화 및 확산

<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>

| 육아휴직 1~3개월 기간 |  |
|---------------|--|
| 지원<br>수준      | ▶母 3개월 + 父 3개월 :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|
|               | ▶母 2개월 + 父 2개월 :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|
|               | ▶母 1개월 + 父 1개월 :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|

※ 한부모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검토

**<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>**

|                  | 1~3개월   | 4~12개월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b>현행</b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첫번째) 통상임금 80% (월 150만원)</li> <li>▶(두번째) 통상임금의 100% (월 250만원)<br/>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 ▶ 통상임금 50% (월 120만원) |
| ↓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b>향후<br/>개편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한 사람만 사용시)<br/>통상임금 80% (월 150만원)</li> <li>▶(부모 모두 사용시, 만 0세 이하 자녀)<br/>통상임금 100% (월 200~300만원)</li> </ul> | ▶ 통상임금 80% (월 150만원) |

- ※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지원(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)은 통폐합하되 경과조치 검토
- ※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사회적 공동 부담

**<참고> 부모 모두 3개월 + 3개월 육아휴직 지원**

- ▶ (추진배경) 지난 20여년간 영아기 자녀에 대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은 담보상태, 짧게라도 남녀가 함께 육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**아빠 육아휴직 확산** 유도
  - \* '18년 기준,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은 73.0%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, 남성은 24.2%에 불과(통계청)
- ▶ (취지) 남녀 모두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출산·양육으로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,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  
  
영아기 자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인·촉진하여 **아빠 육아 휴직을 활성화**하고, 남성의 '아빠' 역할을 통해 **가족친화적 삶**을 지원
- ▶ (기대효과)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·보편화되면 그간 여성 위주로만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**직장문화 개선** 및 여성의 **고립육아 해소, 경력단절 예방** 효과 기대

- (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)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
- (중소기업 지원 확대)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,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,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
  - ※ 현행(월 30만원, 대체인력 미채용시)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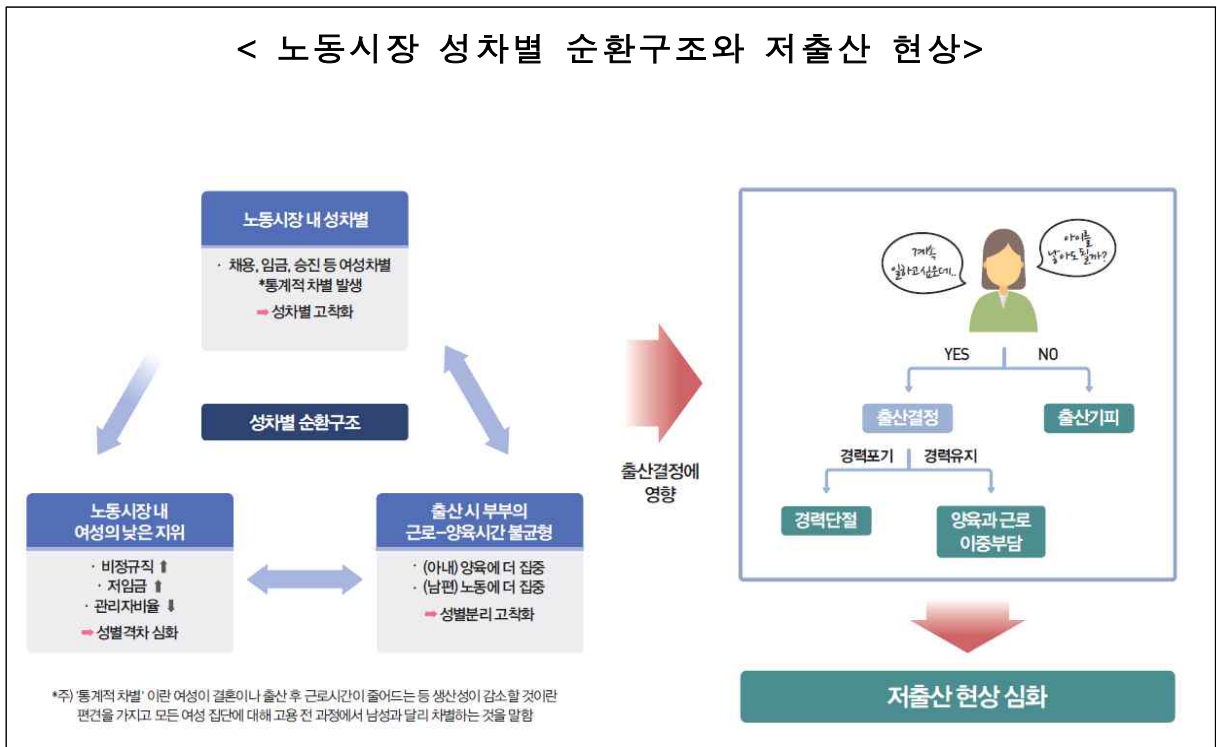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은 15%) 세액공제 확대

※ ('19~'20년) 인건비의 10%(중견 5%) → ('21~'22년) 30%(중견 15%), 3배 상향

- (업무환경 디지털 전환) 원격·재택 등 유연근무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무·IT 컨설팅, 인프라 구축(클라우드·화상회의) 등 지원 강화

② 여성이 결혼·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

출산 양육 등에 따른 성차별은 채용시점부터 생애 전반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청년 여성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단절없이 노동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'출산 기피' 선호



- (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) 채용 기피, 승진 배제 등 성차별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 (신설)

- 기업의 경영공시\*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'채용-임직원-임금'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하여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 마련

\* 공공기관, 상장법인 등이 국민, 주주·투자자에게 중요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

○ (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강화)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AA의 채용성비 항목 추가,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운영 강화

○ (성차별·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)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·성희롱 구제 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(신설)

-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\*하여 신속 대응

\* 일반 신청사건에서 통상 소용되는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단축추진

○ (여성집중 직종 저평가 개선)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(위원회),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\* 등 추진

\* 사회서비스원 : ('20.10월) 8개 → ('21년) 14개 → ('22년) 17개 시도 확대

③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·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

○ (공보육 확대)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% 달성(3차 수정계획) 후 '25년까지 50% 달성

-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·강화

○ (은종일돌봄 지속 확충)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학교 안·밖의 다양한 자원 연계·활용,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

- 놀이·쉽, 창의적 교육과정, 개별 학습지원,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 추진

④ 아동을 개별적 권리 주체로 가족과 사회가 함께 존중하고,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동중심 사회 실현

○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·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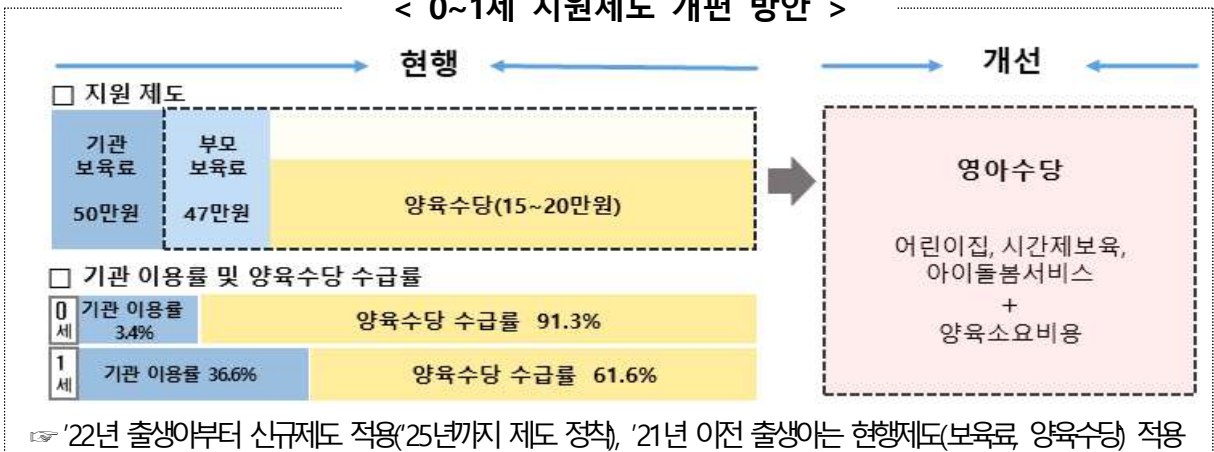
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

- (0세·1세 영아수당) 모든 0세,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. 돌봄서비스(어린이집, 시간제보육, 아이돌봄 등)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(신설)

- 준비기간 등을 감안, '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.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'25년도 0세, 1세 모두 월 50만원 지급

※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,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(0세 월 20만원, 1세 월 15만원)으로 이원화. 대부분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

< 0~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 >



- (첫 만남 꾸러미 ①)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을 60만원 →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('22년~)
- (첫 만남 꾸러미 ②) 아동 출생·육아로 추가되는 비용(기저귀, 분유 등)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일시금(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) 200만원 신규 지급('22년) (신설)
-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'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·사회가 함께 한다'는 인식 지속 확산
- (주거지원 확대)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,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
  - '아이 키우기 좋은 곳'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 ('21~'25년)
  -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(2자녀이상)가 된 경우

##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(신설)

-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 리모델링('21년 150호, '22년 200호, 총 350호)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
  - (국가장학금 지원 확대)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('22년~) (신설)
    - ※ 현재 소득구간 8구간 이하,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(첫째, 둘째, 셋째 구분없이)에 대해 연간 450~520만원 지원 중
  - 출생통보제 도입(신설) 등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,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(정보 공유·연계 등), 아동보호체계 강화(가정형 보호 확대,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)
- ⑤ 임신, 출산과 관련된 생애 계획의 다양화 등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애 건강 전반에 걸친 성·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
- 상호존중 및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,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 으로부터 안전, 모자보건법 개정(여성·영유아 등의 포괄적 건강보장) 등 추진
    - ※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·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, 생리휴가·결석사용, 월경용품 안전성 등 월경건강의 보장
  - 고위험 임신부 지원범위 확대, 임신부·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,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
    - ※ 모자 건강을 위한 난임시술의 안전성 강화,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강화

## 2.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

□ 소득·돌봄·주거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「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」에 중점

### ①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,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 생활 지원 확대

○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\*('21.), 기초연금 확대\*\*('21.)

\*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(18만명) 신규 지원, 기존 수급 노인 약 3만 가구에 추가 지원

\*\* '21.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(소득 하위 40% → 70%)

○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\*,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('21)\*\* 등

\*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 확대,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

\*\* 가입대상 확대(시가 9억원→공시가 9억원), 임대활용, 신탁방식 주택연금 등 운영방식 다양화

-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활성화(신탁업 규제 개선), 「노인금융피해방지법」 제정 추진('21),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방안 추진 (신설)

### ②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및 예방-조기 발견-치료-관리-돌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

○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 조정 및 확대(66·70·80세 → 80세 이후 계속),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(신설)\*,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(시범사업 평가 및 확산)

\* 건강고위험자의 건강개선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 지급

- 거동 불편 고령자 대상 방문형 의료 활성화('19.12월~, 왕진시범사업), 치매진료지침 표준화·검사비 지원 확대('22 15만원), 가족 상담수가 도입('23)

③ 건강·생활·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

- ‘지역사회통합돌봄법’ 제정(‘22)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(~’25.)
-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확대(전체 노인 11%) 및 재가서비스 확대(통합재가급여 도입, 단기보호·돌봄 확대)
  - 공공 요양시설 확충(~’22년 130개소) 및 전문성 강화(인력기준, 평가지표 개선) 등 질 제고 추진

④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(aging in place)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구축

- 신규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공급(‘25년까지 2만호), 고령자보호구역 확대(‘25년 3,000개소 이상) 등 고령친화적 주거·도시 환경
-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대안 확장을 위해 ‘(가칭)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’ 모형 개발, ‘(가칭)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(K-CCRC)’ 모형개발·시범조성 (신설)

⑤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, 생애 말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기반 조성

-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(대상질환 단계적 확대\*, 가정형·자문형 확충, 제공기관 확대), 의료기관 일반완화의료 확대
  - \* 현재: 4개 질환(암, 후천선면역결핍증,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, 만성간경화) → 확대: WHO는 악성종양, 심혈관질환(급사제외), 만성호흡부전 등 13개 질환 권고
 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, 웰다잉 지원체계 법제화 추진

### 3.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

-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 대비 인적 역량 제고(미래형 교육, 평생교육·직업훈련 등) 및 의욕·능력 있는 청년, 여성, 신중년 「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」 구현에 중점
- ①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,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역량 제고
  - **고교 학점제 도입\***, **K-에듀 통합플랫폼 구축\*\***, **그린스마트 스쿨 구현**
    - \* ('20) 마이스터고 → ('22) 특성화고 도입·일반고 부분도입 → ('25) 전체 고교
    - \*\* 콘텐츠·학습관리시스템·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
  -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(~'22년 누적 1,000명), 신산업 특화 대학 교육과정 개발('21년 40개교) 등 전문인재로서의 성장 지원
  - **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**(역량이수제, 다학기제, 원격교육 활성화) 및 **직업훈련 프로그램·콘텐츠 확충\***
    - \*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(STEP) 고도화(~'21), 스마트융합훈련 활성화( '21년 3천개)
  - **학습비 지원\***, **학습휴가 기반조성** 등 누구나 평생교육·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
    - \* 국민내일배움카드 :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참여시 50만원 추가 지원평생교육바우처 : (현재) 최대 35만원 → (개선) 기본 35만원, 최대 70만원
- ②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, 자립·결혼·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 강화
  - '21~'25년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,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등 청년가구 주거 지원
    -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·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며,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·학자금 상환부담 완화

※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실직·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( 3년간 상환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)에 포함

- 「청년기본법」 시행('20.8월)에 따라 정부(중앙·지방)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청년 대표성 제고

### ③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- 출산·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\*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\*\*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

\* (재직여성) 노무, 심리상담 / (청년여성) 진로설계, 경력개발 코칭, 고충·노무상담 / (기업문화개선) 성평등 인사지침 마련, 직장문화 개선 기업컨설팅

\*\* 새일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기업에 고용장려금(80만원, 신규) 지원

-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지원\*, 여성 전용 벤처펀드\*\*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 양성

\* 과학기술분야 진로, 직무탐색 등 지원 : ('20) 400명 → ('21) 450명

\*\* '20~'22년 600억원 조성(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60%)

### ④ 신중년의 계속고용 지원 및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, 퇴직 후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사회공헌 활성화

- 계속고용장려금,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

-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월40~80만원), 전문인력 재취업지원(기술인력, 연구인력 등)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 활용 기회 확대

- 생애경력설계(정부지원 경력설계-훈련-취업지원 패키지), 재취업지원서비스(기업), 생애전환기 노후준비(국민연금공단) 등 신중년의 경력설계 및 역량개발 강화

## 4.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

- 다양한 가족, 연령 통합, 지역상생,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시스템(법·제도) 혁신에 중점
  - ① 가족다양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,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을 제도화
    -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혼인·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(신설)
      - \* 건강가정기본법 개정,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(확인요건 명확화로 신속한 신고) 등
    -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및 양육비 지원\*, 다문화 가족의 정착\*\*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
      - \* 양육비 지급 확대(생계급여·아동 양육비 병급 등), 추가 양육비 지급 대상 만24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
      - \*\* 다문화 부모학교 신설('21),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(~'21)
  - ②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'연령통합적 사회'로의 이행을 위해 세대간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
    - 우리사회가 지향할 연령통합의 의미를 설정하며, 생애연령기준, 부양-피부양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
      - \* 교육, 건강, 인지능력을 고려하는 부양비, 기대수명으로부터 산출하는 장래연령접근 등
    -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·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      - \* 연령·세대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노인차별 미디어 모니터링 등 실시
  - ③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및 개인단위 사회 보장제도로의 진전을 위한 기반 조성

-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(일하는 모든 취업자로),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, 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 검토
- 출산·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(인정기간 확대, 인정시기 등) 양육크레딧 도입 검토
-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 정보 공유 확대, 비정형근로자 소득 파악 기반 마련

④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상생 기반 구축

- 지역청년의 지역내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·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을 검토 (신설)
  - 지역공모사업 우대\*,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(p194)
  - \*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(행안부, 33%) 및 가점 부여 확대

⑤ 합리적인 선제 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,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·경제 시스템 구축

-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대응 및 고령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기술 개발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
  - \*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및 고령친화기술 R&D 기본계획 수립
  - \* 돌봄 로봇(~22년 4종), 비대면 안심·건강관리 서비스 등 자립 지원기술 개발
- 교육, 국방자원, 주택 등 기존 인구규모에 맞춰진 시스템 전반의 수급체계 개선 및 자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
  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 등 사회보험 지속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국민공감대 형성



-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(중위추계)에 기반하여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하는 한편,
  -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,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 추진할 계획이다.
  
- 정부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강조하며, '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'고 협력을 요청하였다.
  - "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'결과'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, "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,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"고 분석하며,
  - "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 이상 소요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을 알 수 있다"고 강조함
  - 이에 정부는 "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,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의지를 밝힘
  -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, 기업, 지자체,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"고 강조함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소 속                      | 직 위 | 성 명 | 전화번호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</b>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래총괄과<br>(총괄)            | 과 장 | 권병기 | 02-2100-1240 | bkay@korea.kr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팀 장 | 송명준 | 02-2100-1241 | smj6428@korea.kr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기관 | 구본익 | 02-2100-1242 | bonuk3986@korea.kr   |
| 세대공감과<br>(고령사회)          | 과 장 | 김지연 | 02-2100-1210 | jiyeonkim2@korea.kr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김현철 | 02-2100-1213 | hckim0904@korea.kr   |
| 지역상생과<br>(지역 상생)         | 과 장 | 김봉준 | 02-2100-1234 | bkim1@korea.kr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박현후 | 02-2100-1235 | ongolchan@korea.kr   |
| 성평등기반과<br>(일·생활 균형)      | 과 장 | 최윤미 | 02-2100-1227 | iscorpion2@korea.kr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팀 장 | 이은영 | 02-2100-1228 | ley322@korea.kr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남효정 | 02-2100-1231 | hynam0523@korea.kr   |
| 포용돌봄과<br>(아동, 가족, 성·재생산) | 과 장 | 조선경 | 02-2100-1220 | sunnykc@korea.kr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팀 장 | 송요현 | 02-2100-1221 | songyohyun@korea.kr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박선민 | 02-2100-1223 | clickpsm@korea.kr    |
| 대외협력담당(청년)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조혜진 | 02-2100-1205 | hyejinyer@korea.kr   |
| <b>관계 부처</b>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복지부<br>(인구정책총괄과)       | 과 장 | 황승현 | 044-202-3690 | hshkmj@korea.kr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민차영 | 044-202-3363 | mcy529@korea.kr      |
| 기획재정부<br>(인구경제과)         | 과 장 | 김승태 | 044-215-8570 | stkim3@korea.kr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박기오 | 044-215-8573 | kokio1007@korea.kr   |
| 교육부<br>(교육복지정책과)         | 과 장 | 장미란 | 044-203-6526 | jangmir@korea.kr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박대선 | 044-203-6531 | echods@korea.kr      |
| 행정안전부<br>(자치행정과)         | 과 장 | 채수경 | 044-205-3101 | sukyungchae@korea.kr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홍미가 | 044-205-3120 | edian78@korea.kr     |
| 고용노동부<br>(고령사회인력정책과)     | 과 장 | 정원호 | 044-202-7454 | scwjwh41@korea.kr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김태은 | 044-202-7418 | liebtraum@korea.kr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박라영 | 044-202-7514 | godply@korea.kr      |
| 여성가족부<br>(가족정책과)         | 과 장 | 김민아 | 02-2100-6321 | kma87@korea.kr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오성미 | 02-2100-6332 | dptlfm1@korea.kr     |
| 국토교통부<br>(주거복지정책과)       | 과 장 | 김명준 | 044-201-4504 | san10000@korea.kr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박희정 | 044-201-4869 | jslhj@korea.kr       |

# 생애주기별 지원대책

##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

함께 일하고  
함께 돌보는 사회

**1 영아기 집중투자**

- 영아수당** · '22년도 출생아부터, '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 지급
- 첫만남 꾸러미** · 임신 시 100만원, 출산 시 200만원 신규 지급('22년)

**2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**

- 확화된 공보육** ·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'25년까지 50% 달성
- 민활일 돌봄** · 학교안팎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돌봄 지속확충
- 초등교육 혁신** · 놀이, 심, 창의적 교육과정, 개별학습지원 등
- 아동의 기본권 보장** · 출생통보제 도입, 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

**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**

- 청년의 주거걱정 날리고** ·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,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
- 청년의 소득지원 높이고** ·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 확대 등
- 성·재생산권 보장** · 평등관점의 성교육,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, 건강검진 및 종합상담 제공

**4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확대**

- 육아휴직 확대** · 여성, 대기업 근로자 ▶ 남성, 중소기업근로자, 특고, 예술인 등 확대
- 부모 모두 3개월 + 3개월 육아휴직제** ·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, 각각 최대 월 300만원
- 임원·출산·육아 불이익없는 승진보장한 노름** · 성평등 경영공표제, 노동위원회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 신설 등

**GENDER EQUALITY**





## 5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



### 2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

- 다자녀 지원대상 기준 완화(3명 → 2명)
-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 부여



###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장학금 지원

- 3자녀 이상 시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
-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지원(중위소득 200% 이하)



## 6

##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·사회 참여확대

###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

- 계속고용장려금+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등 일하는 곳에서 계속고용 지원

### 인생3모작 지원

- 퇴직 후 고용·창업의 기회 확산
- 일자리·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

### 신중년부터 소득을 본뜬하게

-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마련
- 신탁 종합재산관리 활성화 등 자산호보방안 추진



계속고용 장려금


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


노인 일자리



## 7

##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



###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통한 통합돌봄

- 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전국 확산
-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활성화



### 고령친화적 거주환경조성

-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
- 한국형 은퇴복합단지 및 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 개발



###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

-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
-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

